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양 옥 경**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 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 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 이 연구는 2001년도 BK21 뉴가버너스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음.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주제어: 복지의식, 가족주의,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 복지정책육구

1. 서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 노인에 대한 부양, 그리고 가족성원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 등 개인에 대한 복지의 기능을 가족에게 책임지워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의 이러한 기능들이 사회로 이양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등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복지의식은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김상균·정원오, 1995), 복지정책의 수립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 요인이 된다. 각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형태, 경제적 발전정도, 사회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의식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과 관련성을 갖고 발달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지의식은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전통적 사상과 가치의 기반 위에서, 또는 전통사상과 가치와 관련성을 갖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가족주의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가족주의란 가족이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강조되는(최재석, 1979) 원리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에 기반하여 가족 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복지를 논할 때 가족의 책임성만을 강조하여 국가의 복지에 대한 기능수행을 축소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써, 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복지의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으며, 단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성향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대상 집단의 복지의식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김영모, 1980), 또는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중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김상균, 1985; 김성한, 1990) 등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 복지를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의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족주의 가치와 복지인식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21세기 새천년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인식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통해 가족주의와 복지인식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2000년대 한국인의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가족주의 가치관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둘째, 복지의 대상자, 빈곤한 사람,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복지제공의 1차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복지인식

복지인식이란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체계이다. 김상균·정원오(1995)는 복지인식은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발달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인식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인식으로서,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가치지향이나 태도로 개념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Taylor-Gooby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라고 규정하였다(Taylor-Gooby, 1985; 최균·류진석, 2000 재인용). 복지인식은 단순히 개별적 수준에서 복지에 대한 관념이나 입장을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의식으로서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의 총합이며,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 인식과 실천의지 간의 결합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이다(최균·류진석, 2000). 즉, 복지인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지향 등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인식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나타나게 된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극소화하고 가족이나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만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보완적 관점과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는 제도적 관점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복지의식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를 보는 기본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사회의 중심가치를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두느냐, 또는 평등과 우애,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으로 복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복지모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연속선상에서, 또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연속선상의 관점에서 복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들을 구분하고 있다(빅 조지·폴 워딩, 1994).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이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복지의식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복지실천 의지가 결합된 형태로 표출되며,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주도 연대형,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민간주도 연대형, 민간의존 소극책임형의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화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해 개인중심의 책임지향과 국가중심의 책임지향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이란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일컫는 말로서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복지제공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련의 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의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주의 가치관

한국의 가족은 남녀불평등의 위계질서와 세대불평등의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으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상하신분서열에 따라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최재석, 1979)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가치관이 가족 내에도 유입되면서 양대 위계질서가 빠르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라는 우려 섞인 극단의 표현을 낳게 하였다. 당연히 가족주의 가치관도 붕괴된다고 여겨졌다. 전통적 가족주의에서는 사회구성단위의 기본을 '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될 뿐 아니라 어떤 개인도 이 집에서 독립해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전통적 사고에 기초한 때문이었으며(최재석, 1979), 변화하는 가치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한 때문이었다.

최재석(1979)은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광규(1990)는 가족주의를 가족으로 대표되는 친족 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 상위에 놓는 가치관과 이에 준한 행동 양식, 곧 가족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도덕률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가족주의 가치관은 조선시대 지배층이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실천적 규범으로 내세운 것으로 그 결과 가족주의가 사회나 집단 내에서 주축이 되는 하나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육선화, 1989; 이효재, 1994).

그리고 그 가족이테올로기가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인식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같이 광범위한 가족주의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에 대해 옥선화(1989)는 가족 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가족우선성'은 집합체와 그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보다는 집합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며,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가계의 지속을 통해 유지되는 전통 사회에서 가계 유지와 조상숭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공경의식'은 부계 가족 집단의 유지, 존속 및 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제권자로서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효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은 집단의 목표가 집단 자체의 유지와 존속이므로 가족집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집단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협조가 요구된다는 원리를 뜻한다고 하였다.

서구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Heller(1970)가 주장하는 일종의 가족결속력(family solidarity)으로서의 가족주의(familism)이다. 가족구성원임을 느끼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을 통합시키는, 가족자산을 개별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가족의 영속화에 관심을 갖는, 부모와 결혼자녀, 형제자매간의 상호조력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신수진, 1998,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서구에서의 가족주의 개념은 사회의 하위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의 결속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의 가족주의 개념은 단지 사회구성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중심축으로서 이테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문화의 중심원리가 되어왔다는 것이 차이로 하겠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Esping-Anderson(1999)이 주장하는 가족주의(familism)이다. 그는 탈가족화(de-familisation) 논의를 통해 가족이 가족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게 하는 가족주의적 사고는 복지인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는 복지국가 체제연구에서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족주의를 변수로 사용하면서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는 가족주의정책을 통해 가족의 책임수행이 어려울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탈가족화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가족에게 부양과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최경석 외, 2001)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되는 가족주의는 본 논문에서 가족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족주의(familism)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정책이테올로기로 여겨지며, 좀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가족주의보다는 '가족화주의'가 더 맞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주의와 '가족화주의'는 가족이 논의의 핵이 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 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내려온 한국 사회의 중심 가치로서 가족이 다른 어느 사회 집단이나 개인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족중심적 가치 규범이다. 반면, 부모에 대한 효와 친족집단에 대한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통한 가족성원 간의 상호부양과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였던 복지의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해오도록 뒷받침해주던 사회적 가치체계라는 점에서는 정책이테올로기의 개념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주로 이념형의 규명, 즉 의식의 경향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상균·정원오, 1995). 의식의 경향성이라 함은 복지에 대한 이념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마다 이러한 이념 및 의식의 모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최초의 연구는 김영모(1980)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2,000명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를 한 이 연구는 복지권, 빈곤, 실업, 질병, 노인문제 등 7개 영역에서 복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개인, 가족, 친척, 개인과 정부, 직장, 지역사회, 정부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53.0%, 정부가 13.2%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실업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이 34.1%, 정부책임이 31.4%로, 개인과 정부책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28.2%, 가족책임이 33.3%, 정부의 책임이 15.3%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부양이 가장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복지의식의 모형은 자유방임형, 보완적 자유주의형, 제도적 자유주의형, 그리고 사회주의형이었으며,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의식은 보완적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의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제도적 자유형과 사회주의형 복지모델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의 전국조사로는 김상균·정원오(1995)의 20세 이상 전국민 1,1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의료, 교육, 장애, 실업, 조세 등 9개 영역에 대하여 좌에서 우로의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계층 판단, 소득수준 및 직업에 의한 사회적 계층의식을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연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복지 의식은 각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평등에 관한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문제와 조세에 대한 의식이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 의식은 좌파에 가까웠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교육과 의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었으나, 실업자에 대한 태도나 본인의 복지부담의식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복지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연구와 1990년대 연구를 비교해볼 때 한국 국민의 복지 의식은 전반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복지의 실시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책임을, 그리고 교육과 의료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1985)에서 공단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성한(1990)이 보건사회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의 복지 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산, 오사카, 시카고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연구 결과 한국인은 부모부양의식과 부모와 자녀의 동거의식에 있어 세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보여주었으며, 장애인인과 장애아동을 복지수혜의 일차적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신섬중·박병현, 1995).

최균·류진석(2000)은 복지인식을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 의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가치차원에서는 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태도차원에서는 사회복지 실시의 목적,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복지실천의 의지영역에서는 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인식을, 마지막으로 복지책임 주체인식 영역에서는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을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사회, 국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복지인식은 이중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주의적 신념에 기초한 집합주의적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형태의 가치관의 혼재와 복지예산의 필요성과 복지실천 의지간의 괴리현상, 그리고 복지책임 주체의 인식과 실천 의지간의 불일치 현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현재까지 행해진 복지인식 관련 연구들은 복지인식의 경향성을 개인 책임과 정부 책임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또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복지 개입 여부에 대한 찬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반면에 복지인식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인 가족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조명하여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만 간략히 살펴보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으며(최재석, 1979; 옥선화, 1989; 박혜인, 1989; 한남제, 1989), 주로 사회학과 가정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는 가족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제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만 활발하였을 뿐 가족의 개념이나 이념, 가치관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구의 경향이 이렇다 보니 가족의 이념과 복지이념 및 복지정책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이정숙(1982), 이혁구(1999), 양옥경(2000; 2001)의 연구가 이 영역에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효상상과 가계계승 및 부모부양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전반적인 가족 가치관으로서 현재까지도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로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이효재, 1971; 박혜인, 1988; 옥선화, 1989)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한남제, 1994; 김규원, 1995; 신용하·장경섭, 1996; 양옥경, 2000)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 전체의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아울러 성평등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규원, 1995).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어,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한남제, 1994)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족의 양육과 보호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욕구를 증폭시키는 복지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과도기적이며, 농어촌이 도시지역 보다 전통적 가치관이 더 많이 남아있다(최정혜, 1998)는 연구보고도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전통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으며(김재은, 1987; 최정혜, 1997·1998; 한남제, 1989),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옥선화, 1989; 백미화, 1990; 서진순, 1993).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6월 10일~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10월 9일~11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을 기혼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추출의 방법으로는 체계적인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의 방식을 병행하였다. 기혼 여성 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서울 지역의 19개 구를 강남·북, 그리고 이를 다시 각각 동·서로 구분하여 각기 2개 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8개 구에 속한 동을 다시 무작위로 각 2개씩 추출하여 총 16개 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을 토대로 하여 다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50%씩 할당표집하였다. 기혼 남성 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전문직, 사무직, 생산 및 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그리고 실직 및 무직 등 직종별로 조사대상자를 나눈 후 각각의 직종별로 세부 직종을 다시 나누어 총 18개의 직종(의료인, 교수, 연구원, 성직자, 일반 회사원, 교직원, 자영업자, 경영주, 판매원,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 기술공, 생산직, 실직 및 무직, 그리고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직종별 할당 표집을 하였다. 그러나 사무직과 생산기술직은 사무실과 공장 등에서 일제히 답해주는 경우가 많아 높은 회수율로 할당된 표본을 채우기 쉬웠으나, 판매서비스나 자영업의 경우 1-2명씩 표본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할당된 표본을 채우기도 쉽지 않았고 또한 회수율도 매우 낮았다. 이는 표집의 편기현상을 초래하여 직종별 할당표집의 의미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집이 우선 서울지역 및 기혼으로 한정된 것, 남녀 표집을 별도로 한 것, 그리고 남성의 직종별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등은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설문지는 모두 자기응답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혼 여성 조사에서는 67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9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혼 남성 조사에서는 6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576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 39부를 제외한 53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131부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몇 개의 척도를 포함하는 설문지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는 복지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지제도인식 척도, 복지책임주체 인식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 복지정책욕구인식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가족주의 척도¹⁾가 사용되었다.

(1) 복지제도인식 척도

복지제도인식 척도는 김영란(1995)이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Taylor-Gooby의 척도를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고 4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한 것이다. 복지제도인식 척도는 복지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들로서, '복지제도는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 '복지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다',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한다',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동의한다(5점)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66$ 이었다.

(2) 복지책임주체 인식 설문지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지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복지인식 관련 선행연구, 특히 Cook & Barrett(1992)의 복지정책 조사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 복지정책의 내용과 복지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가난한 사람, 실업자, 노인, 청소년 및 아동,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었다.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주체는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이나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정부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복지정책욕구인식 척도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역시 기존의 복지인식 관련 선행연구와 Cook & Barrett(1992)의 설문지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현재 한국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가 적당한지 아니면 증가 또는 감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감소'(1점)부터 '매우 증가'(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요 복지정책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비보조, 의료보호, 영구임대주택, 직업훈련, 고령자 공공요금 면제, 육아휴직제도, 부모부양자 세금감면제도, 그리고 효친휴가제도의 12개

1) 가족주의 척도에 관해서는 양옥경·김혜영(2001)의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가족과 문화』, 제13집 2호, 한국가족학회)를 참고할 것.

항목을 포함하였다. 하나의 척도로서 복지정책욕구인식 척도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40$ 이었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남성은 47.5%이었고, 여성은 52.5%였으며, 평균 연령은 41세로 23세부터 78세까지 분포되었고, 3·40대가 68.4%를 차지하였다. 초혼이 929명(84.5%)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실혼 69명(6.3%), 이혼 33명(3.0%), 사별 40명(3.6%), 그리고 재혼 20명(1.9%)이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75명(6.8%), 고졸 284명(25.9%), 전문대졸 183명(16.7%), 대졸 438명(40.0%), 그리고 대학원 이상 115명(10.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종교는 불교 217명(19.5%), 기독교 427명(38.3%), 천주교 167명(15.0%), 그리고 무교 289명(25.9%)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유교를 별도로 질문하였으나 10명(0.9%)으로 매우 적어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았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313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109명(10.0%), 판매서비스직 83명(7.6%), 생산기술직 및 노부직 172명(15.7%), 자영업 및 회사경영인 71명(6.5%), 실직 및 무직 24명(2.2%), 그리고 기혼여성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부가 263명(24.0%), 기타 59명(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은 100만원 미만 117명(12.0%), 100만원-200만원 미만 317명(32.4%), 200-300만원 미만 282명(28.8%), 300만원-500만원 미만 240명(24.5%),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22명(2.2%)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남편과 부인으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151명(14.2%),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속한 응답자가 695명(65.2%),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3세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가 142명(13.3%)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가 줄어들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추세를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주의 가치관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균 2.9244점으로 중간을 약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기혼 남성과 여성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지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영역에 대한 결과에서는 가족중심성이 평균 3.7010점으로 모든 하위영역들 가운데 가장 높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계가문의 영속성이 3.0568점을 보였으며 친족부조 및 조상숭배 영역과 부모공경의식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나타냈다.

이 같은 가족주의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평균 3.0438점으로 여성의 2.8123점보다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남성의 가족주의 의식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부모공경영역과 친족부조영역이었으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영역은 가족중심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 특성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약화되었으나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가족중심성은 전체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지지를 훨씬 상회할 만큼 오히려 강하게 남아 있으며, 남·녀 동일하게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이나 친족에 대한 부조 및 조상숭배에 대한 가치관은 남·녀 동일하게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와 가계계승,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등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던 1970년대 이효재(1971)의 연구나 1980년대 옥선화(1989)의 연구에 비하면 특히 효나 부모공경 및 친족부조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본 연구는 그 변화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에 이르러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약화되어 가는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교육의 증가로 인한 의식의 변화가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가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인식도 변화하여 집안이나 가장에게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같은 가족주의 가치관은 본 연구에서 복지인식과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평균점수인 2.9244점을 기준으로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뉘었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은 전체의 557명(50.9%)이었으며, 높은 집단은 554명(49.1%)으로 두 집단에 거의 반씩 균등히 나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별분포를 보면,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에는 남성 227명(39.5%), 여성 348명(60.5%)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속하였으며,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에는 남성 310명(56.0%), 여성 244명(44.0%)으로 남성이 더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으며($\chi^2=30.719$, $p<.001$), 이것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

항 목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연령	평균	41.6세	40.5세	41.0세
	20대	57(10.8)	66(11.5)	123(11.1)
	30대	203(38.3)	208(36.2)	411(37.2)
	40대	140(26.4)	205(35.7)	345(31.2)
	50대	85(16.0)	83(14.4)	168(15.2)
	60대	45(8.5)	13(2.3)	58(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4.9)	49(8.6)	75(6.8)
	고졸	129(24.5)	155(27.2)	284(25.9)
	전문대 졸	78(14.8)	105(18.5)	183(16.7)
	대졸	214(40.7)	224(39.4)	438(40.0)
	대학원 이상	79(15.0)	36(6.3)	115(10.5)
결혼상태	초혼	470(89.2)	459(80.1)	929(84.5)
	사실혼	33(6.3)	36(6.3)	69(6.3)
	재혼	10(1.9)	10(1.7)	20(1.9)
	사별	2(0.4)	38(6.6)	40(3.6)
	이혼	9(1.7)	24(4.2)	33(3.0)
	별거	3(0.6)	6(1.0)	9(0.8)
직업	사무직 및 회사원	163(30.5)	150(26.8)	313(28.6)
	전문직	85(15.9)	24(4.3)	109(10.0)
	판매서비스직	41(7.7)	42(7.5)	83(7.6)
	생산기술직 및 노무직	131(24.5)	41(7.3)	172(15.7)
	자영업 및 회사경영(벤처등)	67(12.5)	4(0.7)	71(6.5)
	전업주부	-	263(47.0)	263(24.0)
	실직/무직	15(2.8)	9(1.6)	24(2.2)
기타(복사, 군인 등)	33(6.2)	26(4.7)	59(5.4)	
수입	100만원 미만	46(9.3)	71(14.6)	117(12.0)
	100만원-200만원 미만	175(35.6)	142(29.2)	317(3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56(31.7)	126(25.9)	282(28.8)
	300만원-500만원 미만	111(22.6)	129(26.5)	240(24.5)
	500만원 이상	4(0.8)	18(3.7)	22(2.2)
가족구성원	부부가족(남편+부인)	77(15.0)	74(13.4)	151(14.2)
	부부와 자녀	336(65.6)	359(64.8)	695(65.2)
	남편의 부모+남편+부인+자녀	53(10.4)	57(10.3)	110(10.3)
	부인의 부모+남편+부인+자녀	17(3.3)	15(2.7)	32(3.0)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1(2.1)	12(2.2)	23(2.2)
	기타	18(3.5)	37(6.7)	55(5.2)
종교	불교	97(18.3)	120(20.5)	217(19.5)
	기독교	199(37.5)	228(39.0)	427(38.3)
	천주교	63(11.9)	104(17.8)	167(15.0)
	무교	162(30.5)	127(21.7)	289(25.9)
	기타(유교 등)	10(1.9)	5(0.9)	15(1.3)

<표 2>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

평균(s.d.)

내 용	남 성	여 성	전 체	t
가족주의	3.0438(.5513)	2.8123(.5988)	2.9244(.5880)	6.736**
가족중심영역	3.7010(.5862)	3.5536(.6437)	3.6237(.6212)	4.006**
부모공경영역	2.5566(.7213)	2.2794(.7529)	2.4113(.7506)	6.302**
부계가문영역	3.0568(.8617)	2.8361(.9242)	2.9411(.9014)	4.137**
친족부조영역	2.9690(.7830)	2.6887(.8100)	2.8209(.8903)	5.942**

** p<.01

3) 복지인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 복지인식은 복지제도 인식과 복지책임주체 인식, 그리고 복지정책육구 인식의 3가지 차원에서 말하고자 하며, 각 차원에서의 수준 및 정도를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 분석하였다.

(1) 복지제도 인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① 복지제도 인식 수준

본 연구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각 항목별 인식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든가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는 등의 긍정적 항목에 있어 중간 점수를 줌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한다',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가족에게 소홀하게 한다' 등의 부정적 항목에서는 3점 미만의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어 복지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높인다'는 평균 3.3002으로 모든 항목 중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이 모든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은 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생활의 안정감을 높여준다는 그 기본 취지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연결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세금부담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에는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폭될 뿐 아니라 상대적인 반감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다'(2.9015)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2.5477)의 점수들도 높은 편인데 이 역시 복지제도의 활용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2.6444)은 아니지만 복지수혜자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2.3086)도 아닌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복지스티그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 복지제도 인식

문항번호	내용: 복지제도는	평균(sd)
		전체
1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	2.9732(1.1794)
2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2.6444(1.1951)
3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한다.	2.5031(1.0930)
4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2.3986(1.0063)
5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	2.5477(1.0747)
6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다.	2.9015(1.1963)
7	자기 가족에게 소홀하게 한다.	2.3273(.9396)
8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	3.2233(1.0990)
9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높인다.	3.3002(1.1531)
전체	복지제도인식 ²⁾	3.2083(.6055)

이와 같은 각 항목별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척도로서 갖는 전체 복지제도 인식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3.2083으로 나타났다.²⁾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성원들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복지를 늘리거나 복지를 위한 투자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점차적인 복지의 개선이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의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복지제도 인식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수입, 그리고 직업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만 있었으며, 연령, 학력, 종교, 수입, 직업 등 다른 영역에서는 복지의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이 3.2993으로 남성의 복지의식 3.10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김영모의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제도적 복지모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최근 20년간 여성들의 진보된 사회의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변화양상으로서 과거보다 증대된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복지의식의 신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2) 복지제도에 관한 부정적 질문들(문항번호 3, 4, 5, 6, 7, 9)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다. 연령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매우 미미한 차이로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 또는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그리고 종교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복지인식을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못 미쳤다. 수입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복지제도 인식을 보였으며, 직업에서는 주부집단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복지제도 인식 비교

항 목	구 분	평균(표준편차)	T/F
성 별	남성	3.1083(.5828)	-5.363***
	여성	3.2993(.6119)	
연 령	20대	3.1747(.6095)	1.962
	30대	3.1526(.5866)	
	40대	3.2444(.6167)	
	50대	3.2697(.5881)	
	60대 이상	3.2895(.6748)	
학 력	고졸 이하	3.2137(.6199)	1.707
	대졸	3.1840(.5972)	
	대학원졸 이상	3.2959(.5986)	
종 교	불교, 유교	3.1902(.6058)	2.868
	개신교, 천주교	3.2464(.6096)	
	부교, 기타	3.1448(.6002)	
수 입	150만원 이하	3.2147(.6414)	.451
	150-300만원 이하	3.1830(.6101)	
	300-450만원 이하	3.2196(.6105)	
	450만원 이상	3.2579(.5728)	
직 업	사부직	3.2017(.5804)	1.584
	전문직, 자영업(벤처 등)	3.1580(.5981)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3.1519(.6227)	
	전업주부	3.2794(.6348)	
	실직, 무직	3.1580(.4735)	
	기타	3.2756(.6105)	

*** p < .001

③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복지제도 인식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의 복지제도 인식 평균은 <표 5>에서 보이듯이 3.2497점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의 평균 3.16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소홀히 한다'든지, '일할 의욕을 꺾는다'든지, '세금부담을 높인다'든지 등의 항목에 부정적인 답을 함으로써 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집단에서보다는 복지제도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의심해 왔던 바 그대로 한국인의 복지의식, 그 중에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두 집단 모두에서 복지의식이 3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조차 일정 수준을 넘어서 복지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가족주의에 따른 복지제도인식 차이 비교

평균(s.d)

내 용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t
복지제도인식	3.2497(.6262)	3.1649(.5811)	2.354*

*p< .05

(2) 복지책임주체와 가족주의 가치관

① 복지책임주체 인식

본 연구대상자의 복지제공 1차 책임주체에 관한 인식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의 책임은 당사자 자신에게 있다(61.3%)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있다(37.5%)는 견해와 정부에게 있다(36.2%)는 견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노인부양과 청소년 및 아동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족과 친척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가장 우세하였는데, 노인의 경우 45.0%, 청소년 및 아동의 경우 31.1%가 가족과 친척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제공 영역에 있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42.0%, 장애인의 경우 41.5%, 그리고 여성가장의 경우 33.3%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복지제공을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재 우리 사회 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문제중심적이고 욕구중심적인

것으로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1차적 복지의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반면에 노인부양과 청소년 및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자 개인이나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친척에게로 돌리고 있는데, 개인책임주의와 가족책임주의의 혼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적인 전통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회성원들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제공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주도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1980년대, 1990년대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구조적 차원에서의 빈곤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빈곤을 해석하려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할 수 없다는 옛날 생각 그대로인 것이다. 반면에 실업자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과 정부 및 국가의 책임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지난 1997년 이후 IMF체제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을 경험하면서 실업에 대한 이해가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사회구조적인 차원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6> 복지책임주체 인식

명(%)

복지대상자	책임주체					전체*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 및 지역사회	기업	정부	
가난한 사람	662 (61.3)	82 (7.6)	106 (9.8)	26 (2.4)	204 (18.9)	1080 (100.0)
실업자	405 (37.5)	46 (4.3)	90 (8.3)	147 (13.6)	391 (36.2)	1079 (100.0)
노인부양	204 (19.1)	481 (45.0)	95 (8.9)	47 (4.4)	243 (22.7)	1070 (100.0)
청소년 및 아동보호	120 (11.1)	336 (31.1)	316 (29.3)	48 (4.4)	259 (24.0)	1079 (100.0)
장애인	80 (7.5)	194 (18.1)	289 (26.9)	65 (6.1)	445 (41.5)	1073 (100.0)
여성가장	177 (16.5)	224 (20.9)	258 (24.0)	57 (5.3)	358 (33.3)	1074 (100.0)
소년소녀 가장	73 (6.8)	210 (19.5)	285 (26.4)	58 (5.4)	453 (42.0)	1079 (100.0)

* 전체의 N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자로 인한 것임.

②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복지책임주체 인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복지책임의 1차적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복지책임주체의 5개 영역을 다음과 같이 3개 영역으로 재조정하였다. 우선, 가장 기초적이며 비 공식적인 자신 및 가족과 친척의 한 영역으로 묶고, 공식적이지만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이웃과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을 또 하나의 영역으로 묶은 후, 공공영역의 대표인 정부와 함께 3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같은 영역의 재 구분은 복지책임 주체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데는 5개 영역구분이 유용할 수 있으나, 가족주의와의 분석에 있어서는 복지주체의 전형적인 3대 영역인 가족(개인 포함), 시장(지역사회 포함), 그리고 정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본 연구대상자의 복지제공 1차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를 가족주의 가치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의 67.8%와 높은 집단의 70.0%가 가난한 사람 자신이나 가족 및 친척에게 복지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가난을 당사자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정부에게 가난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가 21.5%로 높은 집단의 16.2%보다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즉,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의 1차적 책임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부, 높은 집단에서는 자신 또는 가족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다.

<표 7>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책임 주체

명(%)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chi^2(p)$
자신 및 가족	373(67.8)	371(70.0)	744(68.9)	6.142 (.046)
기업이나 지역사회	59(10.7)	73(13.8)	132(12.2)	
정 부	118(21.5)	86(16.2)	204(18.9)	
전 체	550(100.0)	530(100.0)	1080(100.0)	

나. 실업자

실업자의 복지책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빈곤의 경우보다 더욱 뚜렷한 집단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족주의 가치관의 반영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8>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은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정부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39.3% vs. 41.3%),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부보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44.4% vs. 31.0%) 나타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아직도 실업의 원인을 개인적인 결함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도 당사자 개인이나 그 가족들이 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다.

<표 8>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복지책임 주제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명(%)
				$\chi^2(p)$
자신 및 가족	216(39.3)	235(44.4)	451(41.8)	12.780 (.002)
기업이나 지역사회	107(19.5)	130(24.6)	237(22.0)	
정 부	227(41.3)	164(31.0)	391(36.2)	
전 체	550(100.0)	529(100.0)	1079(100.0)	

다. 노인부양

<표 9>에서 보이듯이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자신 및 가족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두 집단 모두에서 6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여기서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견해는 19.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 및 가족에게(67.1% vs 61.1%), 반면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정부에게(26.1% vs 19.2%) 노인부양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역시 가족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다.

집단 간의 차이분석을 제외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1980년대 전국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1990년대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한국이 부모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회성원들이 가족과 친척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다른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9>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한 복지책임 주제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명(%)
				$\chi^2(p)$
자신 및 가족	333(61.1)	352(67.0)	685(64.0)	7.102 (.029)
기업이나 지역사회	70(12.8)	72(13.7)	142(13.3)	
정 부	142(26.1)	101(19.2)	243(22.7)	
전 체	545(100.0)	525(100.0)	1070(100.0)	

라. 청소년 및 아동보호

청소년 및 아동보호에 대한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에 대한 견해는 <표 10>에서 보이듯이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은 정부에(25.9%),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자신과 가족에(43.8%) 좀더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청소년 및 아동보호의 책임에 대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책임이 두 집단 모두에서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정부참여의 의미보다는 전체 국가의 책임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0>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청소년 및 아동보호에 대한 복지책임 주체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명(%)
자신 및 가족	224(40.8)	232(43.8)	456(42.3)	2,231 (.328)
기업이나 지역사회	183(33.3)	181(34.2)	364(33.7)	
정 부	142(25.9)	117(22.1)	259(24.0)	
전 체	549(100.0)	530(100.0)	1079(100.0)	

마.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주체에 대한 견해는 <표 11>에서와 같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뚜렷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자신과 가족에게(28.6%), 반면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부에게(46.2%) 높은 책임을 부과하였다. 가족주의의 반영이다. 이같은 집단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이던 낮은 집단이던 자신 및 가족보다는 정부에, 그리고 기업 및 지역사회에 그 책임주체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 이외의 책임주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재해나 사고 등의 후천적 장애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장애를 사적인 책임보다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기대 및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기대와 합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부터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1>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복지책임 주체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명(%)
				$\chi^2(p)$
자신 및 가족	123(22.6)	151(28.6)	274(25.5)	10.971 (.004)
기업이나 지역사회	170(31.2)	184(34.8)	354(33.0)	
정 부	252(46.2)	193(36.6)	445(41.5)	
전 체	545(100.0)	528(100.0)	1073(100.0)	

바. 여성가장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책임 소재의 차이는 <표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는 자신 및 가족과 정부의 책임을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5.3%, 35.8%),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신 및 가족에게 책임을 높게 지켰으나(39.5%) 정부의 책임도 간과하지 않았다(30.7%).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비해 그 정도는 낮지만 기업 및 지역사회에 책임을 묻는 비율은 노인이나 실업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었다.

<표 12>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책임 주체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명(%)
				$\chi^2(p)$
자신 및 가족	193(35.3)	208(39.5)	401(37.3)	3.422 (.181)
기업이나 지역사회	158(28.9)	157(29.8)	315(29.3)	
정 부	196(35.8)	162(30.7)	358(33.3)	
전 체	547(100.0)	527(100.0)	1074(100.0)	

사.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소재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분석결과는 장애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을 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거나 높은 집단 모두에서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45.3%, 38.6%), 그 다음으로 기업과 지역사회를 들었고 자신 및 가족의 책임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에서 보다 정부의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였으나 자신 및 가족의 책임 부분에서는 두 집단이 매우 근접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조차도 소년소녀가장은 그 대상자의 가족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 가족주의 가치에 따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책임 주체

명(%)

책임주체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chi^2(p)$
자신 및 가족	135(24.5)	148(28.0)	283(26.2)	5.013 (.082)
기업이나 지역사회	166(30.2)	177(33.5)	343(31.8)	
정부	249(45.3)	204(38.6)	453(42.0)	
전체	550(100.0)	529(100.0)	1079(100.0)	

(3) 복지정책 욕구와 가족주의 가치관

복지정책에 관한 정부보조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체 복지정책 증가에 대한 욕구는 평균 3.5748점으로 중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복지정책은 3.7883점의 직업훈련으로써 가장 낮은 욕구를 보인 국민연금의 3.2116보다 0.57점이나 높았다. 이는 현재 IMF의 후유증인 심각한 취업난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욕구를 보인 것은 부모부양자 세금감면제도로 3.7876이었으며, 평균보다 높은 욕구를 보인 정책은 영구임대주택지원, 고령자 공공요금면제, 육아휴직제도, 생계비 보조, 휴친휴가제도, 그리고 의료보호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중 4대 사회보험은 평균보다 낮은 욕구를 보였는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4대 보험이 현존하고 있고, 또한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혜택의 수준으로 볼 때 각출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보조의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낮은 욕구를 보인 것은 현재의 약분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및 의료체계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 복지정책 욕구

평균(s.d.)

복지정책	가족주의 낮은 집단	가족주의 높은 집단	전체	t 값
국민연금	3.2183 (.9917)	3.2056 (1.0605)	3.2116 (1.0261)	.205
국민건강보험	3.2164 (1.0517)	3.0928 (1.1037)	3.1549 (1.0789)	1.892
고용보험	3.3189 (.8642)	3.2693 (.9158)	3.2926 (.8904)	.907
산재보험	3.4583 (.8323)	3.4075 (.8846)	3.4311 (.8593)	.962
생계비 보조	3.7361 (.7750)	3.7261 (.7994)	3.7316 (.7863)	.207
의료보호	3.5948 (.9252)	3.5792 (.9458)	3.5860 (.9355)	.272
영구임대주택지원	3.7649 (.8275)	3.7759 (.9032)	3.7680 (.8668)	-.207
직업훈련	3.7604 (.7857)	3.8173 (.8437)	3.7883 (.8150)	-1.138
고령자 공공요금 면제	3.7701 (.7988)	3.7500 (.9257)	3.7596 (.8638)	.380
육아휴직제도	3.8165 (.7916)	3.6592 (.8689)	3.7381 (.8339)	3.096**
부모부양자 세금감면제도	3.7780 (.7615)	3.7981 (.8592)	3.7876 (.8115)	-.404
효친휴가제도	3.6167 (.8279)	3.7190 (.8512)	3.6673 (.8418)	-1.991*
전체 복지정책 증가에 대한 욕구	3.5812 (.5460)	3.5639 (.5924)	3.5748 (.5691)	.329

*p<.05; **p<.01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 사회 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4대 보험제도의 확충보다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세금혜택제도, 효친휴가제도 및 고령자 공공요금면제 제도,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의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각각의 성원들의 개별화된 욕구 수준에 따른 복지제도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새로운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보다 개인의 욕구수준에 따른 개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의 문제와 주택문제의 해결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피보험자의 각출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는 보험의 편향적 성장이 일반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타 복지제도의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한 나머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복지정책에 관한 욕구의 분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정책별 욕구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제도와 효친휴가제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욕구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효친휴가제도에 대한 욕구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결과라 하겠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사람일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육아의 책임을 기혼 여성이 가정에서 전담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 예상되므로,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시 휴직제도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욕구를 높게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 효친휴가제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효사상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효친휴가제도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물론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부모 부양자 세금감면제도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가능한 해석이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지원과 직업훈련에서도 동일하게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욕구를 보였는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족주의적 사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 성원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복지의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기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21세기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 이를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주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가족성원의 양육과 부양을 가족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지의식도 약하고, 또 이를 빌미로 복지제도를 축소,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과연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복지의식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분석에 임하였다. 복지의식은 복지제도 인식, 복지책임주체 인식, 그리고 복지정책욕구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중심성, 부모공경의식, 부계가문영속성, 그리고 친족부조의무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가족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복지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의식은 과거보다 향상되어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김영보(1980)나 김상균·정원오(1995)의 연구에 비해 복지의식이 높아진 결과라 하겠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약화되었으나 그 범위 안에서는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을 높게 보여주고 있었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복지제공 책임주체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과 노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가족을 1차 책임주체로 선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견해는 복지제공에 있어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높은 비율로 정부 차원의 복지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역시 노인에 대한 인식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은 아직도 확고하게 가족책임이 부각되어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장애와 실업의 문제는 국가책임이 부각되면서 보다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역시 기존의 복지의식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것으로써 가족주의 가치관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빈곤은 자신에게, 노인의 부양은 가족에게, 그리고 장애와 실업은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태는 동일하다 하겠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이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휴직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 노인부양과 아동양육과 연관된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에서만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휴직휴가제도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족성원들의 복지욕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의식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관과 복지의식과의 관련성을 논할 때, 상반적인 관계로서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낮은 복지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이 갖는 복지의식과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욕구에 있어서는 가족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노인부양과 아동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욕구가 두 집단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우리의 복지제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데는 부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 가족을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복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제도의 개발과 확충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족주의적 전통이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잘 조우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주어지는 부양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주의적 전통이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적 복지모형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김태한·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0호 pp. 145-159.
-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제7권 pp. 213-255.
- 김상균 198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4호.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호 pp. 1-33.
- 김성한 1990. “보건사회부 관료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계급 및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한국문화총서』, 제12권.
- 박혜인 1988. “한국농촌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분석”,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제16집 pp. 79-101.
- _____. 1989. “한국 가족의 가족주의 가치 분석: 대구·경북 지역의 도시·농촌 비교”, 『효성여대 여성연구』, pp. 71-95.
- 백미화 1990. “가족주의 가치와 가족결속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서진순 1993. “한국가족의 가치관과 여성에 대한 태도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섭중·박병현 1995.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 비교연구: 부산, 오사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7권 pp. 181-207.
- 신용하·장경섭 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pp. 174-199.
- _____. 2000. “한국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호 pp. 70-99.
- 양옥경·김혜영 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3집 2호 pp. 29-55.
- 육선화 1986. “가족주의 가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주의 척도 제작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3호 pp. 143-153.
- _____.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_____. 1990. “농촌 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pp. 161-170.
- 이광규 1990.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2호.
- _____.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pp. 117-148.
- 이정숙 1982.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천과 가족복지의 정책적 고찰”, 『사회복지』, 통권 72호 pp. 7-22.
- 이혁구 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21세기 가족복지의 실천방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호 pp. 11-17.
- 이효재 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_____. 1994. "이데올로기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최경석 외. 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인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pp. 223-253.
- 최정혜. 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6호 pp. 55-69.
- _____.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부양의식", 『한국노년학회지』, 제18권 2호 pp. 47-63.
- 최재석. 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한남제. 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_____. 1994.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다산출판사.
- 빅조지·폴월딩/남찬섭 역. 1994.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한울.
- Cook, Fay Lomax & Edith J. Brrett. 1932. *Support For The American Welfare State: the Views of Congress and Public*, Columbia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Heller, Peter, L. 1970. "Famili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32, pp. 73-80.

Familism and Welfare Consciousness in Korea

Yang, Ok-Kyu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familism and welfare consciousness in Korea. Traditional familism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and the impeding value for welfare program development.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Especially, care of the family members is understood as a family duty and responsibility. And this inhibits Koreans to develop welfare consciousness and further to develop welfare programs at the governmental level. Thus,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sample of 1,131 men and women was selected in Seoul area. As a result, traditional familism is found to be quite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mong Koreans. First, perception of welfare institution is strongly related with welfare consciousness. The respondents in high familism group showed low welfare consciousness. Secon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low in the group of high familism for the aged and youth. In the same context, for the disabled and the unemploye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high in the group of low familism.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sm and the welfare need was not apparent. Such results make possible to conclude that traditional familism among Korean is still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nd welfare ideology. However, although this conclusion should not be used for an excuse to avoid state responsibility but used as a tool to develop a welfare model to strengthen family function as one solid family.

Key words: welfare consciousness, familism, perception of welfare institution, welfare responsibility, welfare policy need

[접수일 2002.8.31 게재확정일 2002.10.3]